

한국의 가계부채의 현황과 취약계층

2017.9.8.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간사

1. 개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수년 간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 자금순환 기준 2017년 3월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¹의 금융부채는 1,586.8조 원에 달하는데, 1년 사이 143.6조 원이 증가한 수치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총량 자체도 오랜 문제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 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가계부채 증가율은 가계소득 증가율을 2배 이상(2016년 기준 가계소득 증가율 4%, 부채증가율 10%) 앞서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내수를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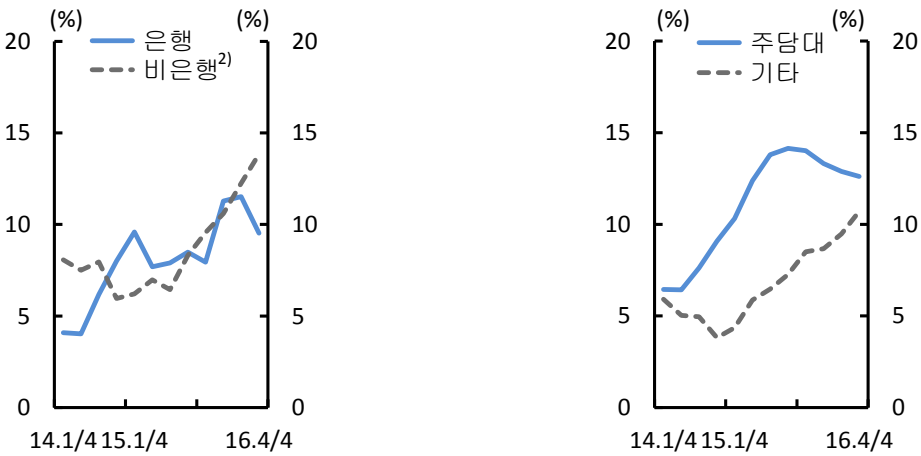
실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에 달하고, 이중 약 75%는 실제로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러한 양적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악화일로에 있다. 실제로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대출 증가율은 2015년 8.5%(44.1조 원 증가)에서 2016년 9.5%(53.7조 원 증가)인 반면, 대출금리가 높고, 은행보다 느슨한 감독을 받고 있는 비은행 대출 증가율이 2015년 8.3%(35.8조 원 증가)에서 2016년 13.8%(64.6조 원 증가)로, 은행 대출에 비해 비은행 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¹ 자금순환표의 “가계및비영리단체”에서가계는일반가계뿐만아니라소규모개인사업자를포함하며 비영리단체는가계에봉사하는민간비영리단체(사회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살단체등)를의함

특히, 상품별로 살펴봐도 부채를 통해 사업비 또는 생활비를 보전하는 가계가 늘어남에 따라 담보대출 보다 신용대출이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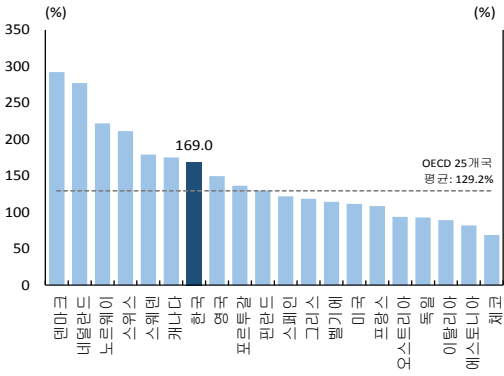
<그림1> 금융기관별 대출종류별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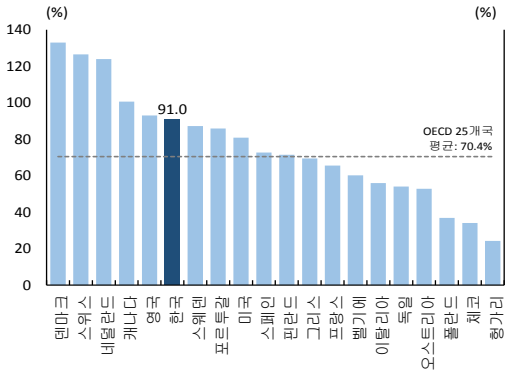
주 : 1) 전년동기 대비 2) 주금공 제외,
 자료 :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가계부채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의 상환능력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2015 년 말 자금순환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9.0%이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29.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 년 이후 26%이상 증가했다. 정작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디레버리징과 소득 증가로 동 수치가 2008 년 135.5%에서 2015 년 111.6%로 하락했다. 영국도 같은 기간 169.4%에서 149.5%로 하락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가계의 상환능력이 극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2>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그림3>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주 : 2015년 말 자금순환통계 기준, 자료: OECD (<https://data.oecd.org/hha/household-debt.htm>)

물론 2015년 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각각 221.5%, 292.0%, 177.8%로 한국의 169.0%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북유럽 국가들은 조세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 조세부담²이 높기 때문에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가계부채 부담비율을 평가할 때 북유럽 국가들의 부담비율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한국보다 높아도 조세부담률 부문을 제거한다면, 실제 부담률은 한국보다 크게 낮게 평가³될 수 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사회안전망은 높은 가계부채 부담에도 가계 소득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면서 이를 통한 채무상환이 가능하여,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² 덴마크의 경우 국민 부담률은 49.6%로 OECD 평균인 34.2%보다 15.4%보다 높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스웨덴, 노르웨이도 OECD 평균보다 조세부담이 높음

³ 한국의 GDP 대비 개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률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4.4%로 스웨덴 12.5%, 노르웨이 10.4%, 덴마크 25.4%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은 수준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가계부채는 양과 질 모두 악화되고 있으며, 상환능력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이는 고용불안·저임금·경기침체 등의 요인과 부채를 동원해 주택 등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채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2. 한국 가계부채의 약점 - 1) 취약계층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2016 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 회원국 가운데 34 위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제도가 촘촘하게 마련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임금 이외의 소득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계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 불안정,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그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채를 동원하고 있다. 생활비 등 주거,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제도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을 부채로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문제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이 꼽히고 있다. 3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로서 저소득자(소득 하위 30%)·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은 시간이 지날수록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에 해당할수록 여러 금융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기존의 빚을 새로운 빚으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를 하는 경우도 있어, 채무상환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 취약계층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2016 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 분위 소득자의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95%, 2분위는 174% 가량에 이른다(3분위 148%, 4분위 131%, 5분위 137%). 비록 부채의 절대액이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의 부담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지고 있는 셈이다.

<표2> 가구특성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과 가구당 보유액									
(단위 : 만원, %, %p)									
구 분		금융부채 보유가구							
		비율	전년차	금융부채	증감률	소득	증감률	자산	증감률
전 체		57.7	-0.2	8,122	7.8	5,696	2.8	39,978	3.5
소득 5분위별	1분위	26.0	-0.1	3,027	-1.9	1,026	2.8	13,841	-3.2
	2분위	53.8	-0.2	4,269	-3.0	2,446	2.3	19,484	-3.1
	3분위	67.1	0.9	5,912	14.0	4,005	2.8	27,278	4.5
	4분위	70.2	-1.3	7,814	5.1	5,964	3.2	38,325	4.5
	5분위	71.5	-0.1	15,245	10.5	11,158	2.8	78,414	4.5
순자산 5분위별	1분위	46.6	0.1	4,328	4.4	2,921	0.3	4,777	-2.3
	2분위	57.3	-0.9	4,842	3.3	3,999	1.8	13,213	2.9
	3분위	64.6	0.1	6,793	13.1	5,023	3.1	25,255	7.3
	4분위	63.0	-0.6	8,145	2.0	6,679	3.8	42,344	4.4
	5분위	56.9	0.4	16,009	10.5	9,348	2.5	109,798	1.6
주택형태별	자가	61.8	-0.2	9,964	7.5	6,306	2.9	49,944	2.7
	전세	57.5	0.3	5,695	2.0	5,399	1.1	31,406	0.2
	기타(월세 등)	45.8	-1.2	3,828	11.9	3,642	1.1	11,065	7.3

주 : 금융부채 보유가구에 대한 평균 금액임

게다가 3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는 2016 년 6 월 말 기준 390 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채무자(1 천 857 만 명)의 21.0%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이 보유한 채무 총액은 2016 년 6 월 말 기준 약 450 조 원이고 1 인당 부채는 1 억 1 천 529 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림4> 다중채무자 DSR



출처 : 정세균 국회의장실

2017년 8월 23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제출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연간소득은 3천 748만원, 연평균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2천 362만원으로 각각 추정됐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간 원리금상환액/연간 소득액)은 63.0%로 전체 채무자 평균(35.7%)보다 27.3%p나 높았다. 특히 대출기관이 많을수록 DSR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기관이 6개 이상인 채무자의 DSR은 74.9%, 5개 71.1%, 4개 66.4%, 3개 5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험가구⁴의 부채규모는 2015년 46.4조원에서 2016년 62.0조원으로

⁴ 가구의 소득과 자산 양 측면에서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가구, [원리금상환비율

증가했으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 7~10 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도 2015년 말 73.5조원에서 2016년 말 78.6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6.2%(한국은행 가계부채 DB 기준)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림5> 취약차주¹⁾ 대출 비중 및 규모²⁾	<그림6>고위험가구¹⁾ 부채 비중 및 규모																											
<table><thead><tr><th>연도</th><th>규모(우축) (조원)</th><th>비중(좌축) (%)</th></tr></thead><tbody><tr><td>12</td><td>84.8</td><td>9.4</td></tr><tr><td>13</td><td></td><td></td></tr><tr><td>14</td><td></td><td></td></tr><tr><td>15</td><td></td><td></td></tr><tr><td>16</td><td>78.6</td><td>6.2</td></tr></tbody></table>	연도	규모(우축) (조원)	비중(좌축) (%)	12	84.8	9.4	13			14			15			16	78.6	6.2	<table><thead><tr><th>연도</th><th>규모(우축) (조원)</th><th>비중(좌축) (%)</th></tr></thead><tbody><tr><td>2015</td><td>46.4</td><td>5.7</td></tr><tr><td>2016</td><td>62.0</td><td>7.0</td></tr></tbody></table>	연도	규모(우축) (조원)	비중(좌축) (%)	2015	46.4	5.7	2016	62.0	7.0
연도	규모(우축) (조원)	비중(좌축) (%)																										
12	84.8	9.4																										
13																												
14																												
15																												
16	78.6	6.2																										
연도	규모(우축) (조원)	비중(좌축) (%)																										
2015	46.4	5.7																										
2016	62.0	7.0																										
주: 1)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 주: 2) 각년도말 전체 가계대출잔액으로 환산한 금액 자료: 한국은행(가계부채 DB)	주: 1) DSR>40%이고 DTA>100%인 가구 자료: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더불어 금융 부채가 금융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가 2012년 132만 5000가구에서 2016년 181만 5000가구로 49만 가구 늘어난 것으로 분석⁵⁾됐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에 짓눌려 한계 상황에 놓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고, 가계부채의 구조가 은행권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상환능력이

(DSR)>40%과 부채/자산평가액비율(DTA)>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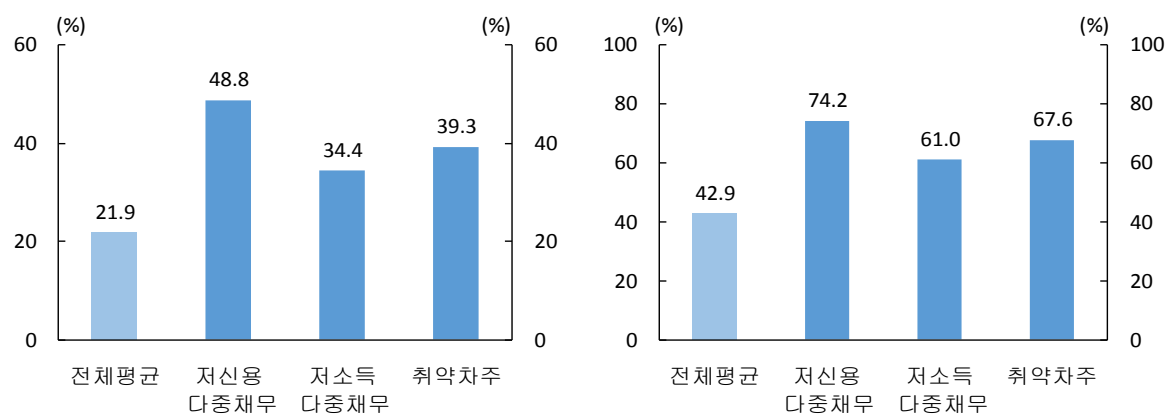
⁵ 2017.2.20.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 및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고서>

양호한 소득 4~5 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약 70%를 보유하고 있다며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계의 채무 상황 능력에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금리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하면 이들 취약계층은 언제 부실화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 이들 취약계층은 비은행 대출 비중이 전체차주 평균(42.9%)보다 높고, 신용대출의 비중도 전체차주 평균(21.9%)보다 높다. 금리수준이 높고 변동금리부로 주로 취급되는 신용 및 비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부담으로 대출 상황에

<그림7>취약차주¹⁾ 대출 중 신용대출²⁾ 비중³⁾

<그림8>취약차주¹⁾ 대출 중 비은행대출 비중³⁾



주 : 1)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소득하위 30%인 차주)

2) 담보 및 보증 대출을 제외한 대출 기준

3) 16년말 현재 차주가 보유한 대출 중 신용 및 비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가계신용)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 한국 가계부채의 약점 - 2) 자영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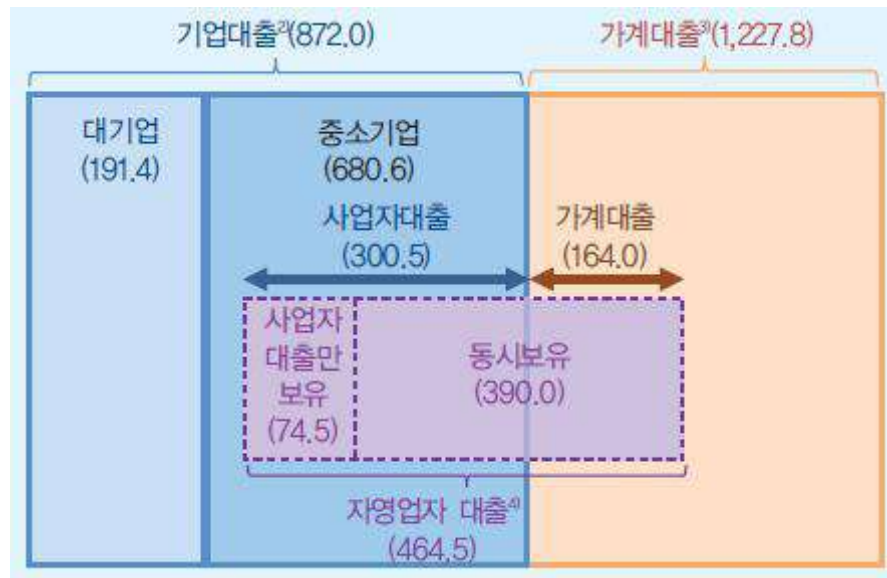


한편,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도 큰 문제다. 앞서 설명한대로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취약한 한국에서 임금은 유일한 삶의 방편이다. 구조조정,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퇴직하는 것은 점차 빨라지는데, 이들 퇴직자들의 삶을 유지할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막대한 빚을 동원해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2016년 10월 말 기준, 570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은행의 <2017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06년 말 264.2만 명에서 2016년 말 316.2만 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은 2006년 말 44.3%에서 2016년 말 57.2%로 상승했다.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가계대출⁶도 2012년 말 63.0조원(전체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53.3%)에서 2017년 3월말 98.2조원(55.3%)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림9> 자영업자 대출 개요¹⁾

⁶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기준



주: 1) 2016년 9월말 기준, 단위 : 조 원, 2) 예금취급기관 기업대출 기준

3) 가계신용통계 가계대출(판매신용 제외) 기준, 4) 가계부채 DB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금 대출로 볼 수도 있겠으나, 구조적으로 퇴직자와 실업자 등이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인 한국의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곧 가계대출에 가깝다.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9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5조 원(141만 명)으로, 이 중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은 300.5조원, 생계자금 마련 등을 위한 가계대출은 164.0조 원이다. 사업자금 목적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은 대출 규모는 390.0조 원(113만 명)으로 자영업자 대출(464.5조원)의 84.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자영업자의 대출이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명목 대출은 주로 은행 대출(85.6%)이지만,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은행 및 비은행 대출이 각각 49.9% 및 50.1%에 이른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6년 9월 말 기준, 3조3996억 원으로 1년



료비, 교육비 등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가계부담 완화대책, 민생대책 등이 병행된 중장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가처분소득의 증가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연금 확대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가맹점, 대리점 등 자영업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본사 등과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개선하고,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임대료 인상을 상한선을 인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노력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갈 길이 멀지만, 이러한 사회경제 전반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끝.